

광주·전남 자치경찰위 ‘1호 시책’ 가시적 성과

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법규위반·시설개선 역량 집중
도, 어르신 범죄예방 중점 추진
고독사·교통사고 줄이기 팔목

경찰 창설 76년만에 새로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시책’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7일 광주시·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

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전남은 어르신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각각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자치경찰위는 사회적 책임인 어린이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1호 시책으로 선정했다. 또 어린이 인구가 많은 광주시의 특성을 고려해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광주시 전체인구 대비 어린이 인구(13세 미만)는 143만명 중 16만명으로 11.3%를 차지해 특·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자치경찰위는 종합대책 마련 이후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2년 6월말 기준 속도위반(30km/h) 19만3,713건, 주정차위반 3만1,224건,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 21건 등을 단속했다. 또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존’으로 규정하고 어린이 교통안전만을 위한 5대기관과 교통안전협의체도 결성했다.

아울러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시설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행공간 확보(지주식 표지 이설/표지판 595개 철거) ▲보호구역 시종점 불일치 개선(313곳) 완료 ▲안전한 하차를 위한 드림존 설치 2곳 완료, 8곳 설치

협업의 ▲무단횡단 금지시설(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 총 2,464m 설치를 완료했다. 이밖에 초등학교 157개, 유치원 115개, 특수학교 7개, 어린이집 176개, 외국인학교 1개 등 어린이 보호구역 456개를 지정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4.6%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해 1호 시책으로 ‘어르신 범죄예방 종합안전대책’을 추진중이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 도민 범죄안전 향상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에서다.

도 자치경찰위는 지난해 7월 정기회

의에서 종합안전대책을 심의·의결한데 이어 위기 어르신 발굴·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활동 강화, 어르신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대응체계 확립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고독사·보이스피싱 등 어르신 치안 문제 737건을 선제적으로 발굴, 이를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생활환경 개선, 상담 지원 등의 조치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5월부터는 홀로사는 어르신 범죄안전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2만1,653명의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필요한 경우 지구대·파출소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확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노인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전남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59%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보호 구역은 타도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위원회는 시군 및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연말까지 노인보호 구역과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20곳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노인보호구역 4곳이 신설됐다.

지난 5월 24일에는 내비게이션 업체인 티맵 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티맵 사용자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날 때 음성으로 이를 알려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티맵은 위원회에 도내 상속 과속 장소와 차량 통행량 등의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위원회는 이 자료를 교통안전 순찰·시설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강병운 기자



지하철1호선 녹동역 현장 방문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7일 오후 지하철1호선 녹동역 배차 확대요청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개발공사,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매뉴얼 제정·영향평가 등
인권존중 선도기관 결실

전남개발공사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전남개발공사는 27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김철신 사장을 포함한 공사 임직원과 한국경영인증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인증원이 실시하고 있는 인권경영시스템 제도는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요건과 체계를 갖춘 조직을 인증하는 제도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8년 지방공기업으로서 유일하게 인권경영매뉴얼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인권경

영위원회 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매뉴얼 및 인권침해구제절차 매뉴얼 제정 등 인권경영시스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또 청년체험형 인턴과 함께 신·구세대가 참여한 세대공감TF를 구성해 인권성숙도 향상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발굴 등 다양한 인권경영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가치계약제도, 행복동행펀드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무와 공정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해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 우수기관에도 선정됐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 제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모집

4개사에 최대 20억 지원

광주시가 지역 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제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모집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지원해 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고 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에 걸쳐 전국에 총 100개사를 선정하고 있다. 광주시도 이와 연계해 지난 2월 4개사를 선정하고, 이번에 2차 모집을 통해 추가로 4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6년간 20억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비롯해 정책자금 대출, 기술보증료 감면과 함께 판로개척, 인재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사와 주사업장이 광주에 소재한 주력산업업종의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1차 모집 요건과 다른 점은 매출액 400억원 미만이라는 매출상한액을 폐지하고, 협업 범위는 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했다.

광주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발표평가 후 선정 후보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해 검증을 거쳐 시가 10월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

이현창 도의원 “시군 매칭사업 개선해야”

재정 고려 차등적용 촉구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전남도의 시군 매칭사업비 배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26일 열린 전남도의 올해 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 비율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며 “전남도는 기초단체의 이같은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매칭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이 최우선 순위가돼야 함에도 전남도 매칭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돼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버텨내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좋은 정책일수록 시군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청년정책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도비 보조비율을 차별화한다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고흥(6.3%), 완도(6.5%), 신안(6.7%), 구례(7.1%) 등으로, 여수시는(29.3%)와 차이가 4배가 넘는 실정이다. /오선우 기자

“선관위·인권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해야”

이형석, 감사원법 대표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선 것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관위와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은 27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

영되던 지난 3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되고,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며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법에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전례 없는 직무감찰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의 직무감찰 계획 발표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3월, 선관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업무보고 요구



를 거부한 직후 이뤄져 보복 감사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한다”며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직무감찰 제외대상 기관으로 명문화해서라도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막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메디넷

진단검사의학의 모든 것

■ 대학병원, 병원, 의원의 검사장비 및 검사시약 문의

■ 학교, 연구소, 병원, 기관, 사업장의 장비인프라 구축 및 초안 제시

■ 분자진단 전문업체 Covid 19 PCR System

■ 최적의 검사장비와 경제성 · 효율성

메디넷

광주광역시 광산로 171번길 104 (우산동)
Tel. 062) 223-3822 Fax. 062) 223-3821